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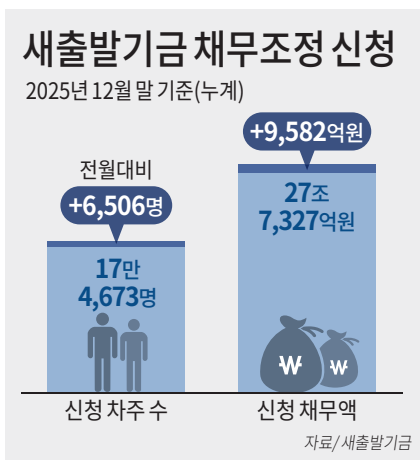
소비회복에도 체감경기 제자리 지난해 ‘새출발기금’ 11조 몰려

엔데믹 이후에도 골목상권 불황
폐업자·연체율 역대최고 수준
직전년도 대비 채무조정 1.7조 ↑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하다. 실제로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채무조정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11조원이 새출발기금에 접수됐다.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히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8일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출발기금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액은 11조22억원이다. 직전년도의 9조3188억원보다 1조6834억원(18%) 늘었고,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인 27조7327억원의 39.7%에 해당한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환경 악화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하 연체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를, 90일 이상 연체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요건 신청 자격에 포함했으나, 코로나 유행 종료에도 불황이 이어지자 코로나 피해요건은 빠졌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정부는 3년의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늘려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3년에 1번, 2024년에 2번, 2025년에는 2번에 걸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 시장의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진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71.2(100보다 높을수록 낙관적)까지 하락했던 소비심리는 작년 7월에는 110.7까지 올랐고, 11월에는 112.3까지 올라 201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회복됐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2024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을 넘긴 폐업자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를 앞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19일 1월분 접수 개시 5분 만에 월간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는 장기연체자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누적 채무조정액은 5조2354억원이다. 전체 채무조정의 53.4%에 해당하며, 2024년 말의 52.3%에서 1.1%p 늘었다. 1인당 채무원금은 87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70%에서 72%로 늘었는데,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감면율을 확대한 영향이다.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서 46.6%로 줄었지만, 1인당 채무원금은 75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이자 감면율은 4.7%에서 5.2%로 0.5%포인트(p) 급등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 금리에 따라 책정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중앙지법,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태군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군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손진영 기자 son@

K-제약사, 글로벌 시장 수천억대 매출

항암분야 등 제품 경쟁력 입증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천억 원대 매출을 내며 바야흐로 ‘국산 블록버스터’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GC녹십자, 유한양행,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신약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 변화를 이끌고 있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요 사업에서 고마진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GC녹십자의 연결기준 2025년 연간 매출은 1조9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5% 커진 691억원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혈장분획제제 매출 5602억원(+17%), 자회사 5309억원(+31%), 전문의약품 4798억원(+14%), 백신 3006억원(+17%) 등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혈장분획제제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알리글로가 미국에서 전년 대비 211% 급증한 151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GC녹십자 측은 “해외 매출 확대가 주효했다”며 “꾸준한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백

라자’도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백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2024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첫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해에는 유럽, 영국, 일본 등 글로벌 핵심 의약품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백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지난해 글로벌 매출 7억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지난해 말 미국 FDA에서 리브리반트의 피하주사(SC) 제형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병용 약물이 투약 편의성을 갖추게 되면서 백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실처방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공략하는 등 매출 다각화에 나섰다.

엑스코프리(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명) 미국 매출은 2020년 2분기 출시부터 2025년 3분기까지 22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의 전체 누적 매출에서 세노바메이트 매출이 96%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국, 12월 중국 등에 연달아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일본에서 도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약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정부, R&D 체계 개편... ‘지역·AI·성과’ 집중

대형 전략과제 패러다임 전환
‘5극3특 성장엔진’ 4년간 2조

정부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 연구개발(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소규모·수도권 중심 R&D에서 벗어나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수요 앵커기업 중심의 대형 전략과제로 산업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산업 R&D를 ▲지역을 위한 R&D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4년간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권역별 첨단산업화를 지원한다.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1조5000억원), 수소환원제철 실증, 특수탄소강 개발 등 지역 산업 위기 대응 R&D도 강화한다.

R&D 지원체계는 지역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기준에 반영한 지역전용 R&D 과제를 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설하고, 비수도권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기관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기관부담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 기업 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50% 감경한다. 제조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고, 12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AI팩토리를 현재 1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제조 AI 선도모델 15개를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등 임바디드 AI R&D와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앵커기업이 주도하는 R&D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앵커기업이 협력기업을 직접 선정해 R&D부터 실증·양산까지 제안하면 정부가 R&D, 규제특례,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대형 과

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 등 3대 기반 강화책도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에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투자사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 박사후 연구원부터 스타엔지니어까지 성장 전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국비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 비중을 2030년까지 30%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는 중단이나 목표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비 자체 정산과 소액 정산 증빙 면제 확대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자가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과 AI, 수요 앵커기업을 축으로 산업 R&D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규제와 사업화 간 간극을 줄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R&D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치권, 경제적 합리성 기반 규제개혁 촉구

》1면 ‘쿠팡 배송규제...’서 계속

정치권에서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영업 금지 등 직접적 제재는 자칫 한미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문제 소지 없이 쿠팡을 견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대형마트는 이미 쿠팡 이상의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규제만 풀린다면 네이버 등과 연계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며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 점포들이 영업시간 제한 탓에 밤새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기존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전환해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은 만료를 10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간 연장됐다.

/손종욱 기자 handbell@